

양계인, 조속한 의무자조금 시행 기대

금년내 육계의무자조금 시행 96.8%,
산란계의무자조금 대의원회 구성 93.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10월 6~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충남 당진군 소재 대호농어민교육복지센터에서 'AI·FTA 대비 양계산업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전국양계인대회가 개최되었다. 본고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양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117명으로 채란인 40.2%(47명), 육계 46.2%(54명), 종계 10.3%(12명), 기타 3.4%(4명)가 답했고, 2~5만수 미만 사육 농가가 7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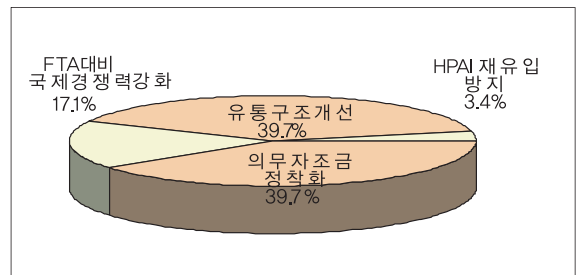
- 편집자주 -

1. 양계산업 당면 현안은?

전국 각지에서 양계 생산자들이 모인 가운데 양계산업의 당면 현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의무자조금 정착화(39.7%)와 유통구조 개선(39.7%)을 우선으로 꼽았고, FTA대비 국제경쟁력 강화(17.1%), HPAI 재유입 방지 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란인들은 계란유통구조의 개선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 같은 이유는 생산자가 아닌, 상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거래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 고시가격에서 할인(D/C)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태가 큰 원인이었다. 앞으로 시장가격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란 집하장을 통한 시장 구조의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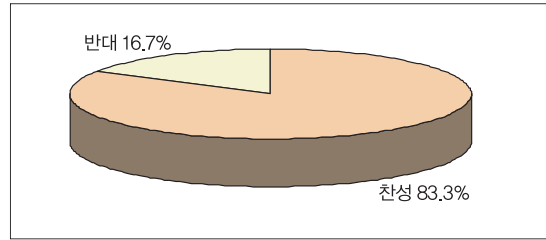
또한 한우, 양돈, 낙농 등 타 축종에서 먼저 시행 중인 의무자조금은 지난해 양계인대회에서 나타난 36.4% 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면서 양계분야에서도 조속히 의무자조금 도입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표1〉 양계산업 당면 현안

2. 협회 기구 중 FTA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양계협회 창립 이후 지난 9월에 정책자문위원회 발족과 함께 첫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양계의무자조금 제도, 검정소 재정비 사업, 협회 정관 등 협회 대내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는 물론 대정부 정책에 대한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 내에 FTA 즉,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대책위원회설치 여부에 대해 양계인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찬성이 83.3%, 반대가 16.7%로 대부분의 양계인들이 협회 기구로 FTA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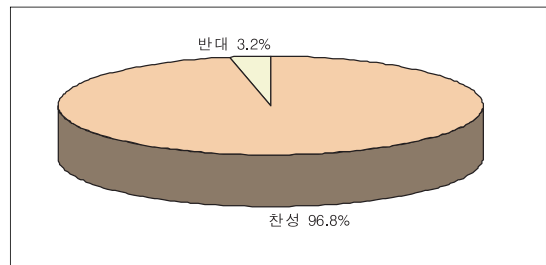


〈도표2〉 FTA대책위원회를 설치에 대한 의견

WTO 출범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미국 등은 이미 FTA가 타결되었고,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이 추진 중이다. 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과 다자체제 자유화를 선도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미 FTA를 비롯해 한EU FTA 등은 국내 닭고기 시장개방화의 압박 속에서 FTA로 인해 국내 육계생산농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졌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밑바탕 없이 개방화를 통한 경쟁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결국 과잉 경쟁만 심화시킬 우려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가 시급함을 전하는 대목이다.

3. 금년내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 실시에 대해?

2004년 11월 공동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05년 135명의 대의원을 선출되었고, 관리위원 선정 건을 놓고 4차례에 걸쳐 대의원총회가 무산되면서 3년 동안의 시간이 지체됐다. 현재는 정부 측의 당연직 관리위원 선출 건이 지연되면서 자조금 추진이 부진하다.



〈도표3〉 금년내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 실시에 대한 의견

하지만, 생산자가 스스로 걷는 자조금에 대해 96.8%인 대부분의 농가가 의무자조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본회에서도 육계의무자조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정부에 당연직 관리위원을 조속히 선정해 달라는 서한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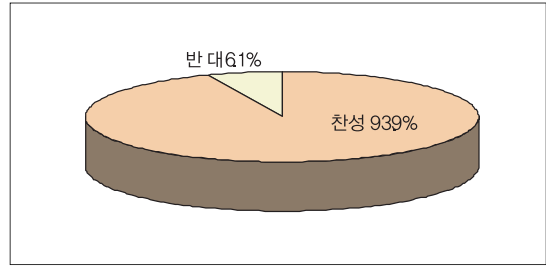
4. 금년내 산란계 의무자조금 대의원 구성에 대해?

산란계 의무자조금은 최종산물이 도축장을 통해 나오는 타 축종과 달리 사육기간 중에 산물이 생산

되는 모호한 상황에서 거출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 93.9%가 금년내 산란계 의무자조금 대의원 조급 대의원이 구성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하면서 불황이 지속되는 양계산업의 돌팔구로 의무자조금 시행에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지난 9월 채란인 대회에서는 적합한 거출기관으로 병아리(부화장) 45.9%, 사료업체 32.9%, 노계(도계장) 19.2%, 계란(집하장) 2.1% 순으로 조사됐다. 불황의 파고를 뛰어넘어 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 거출대상 선정에 있어 업계간 조속한 협의가 필요로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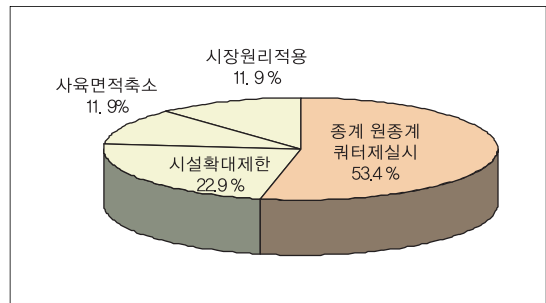
〈도표4〉 금년내 산란계 의무자조금 대의원 구성에 대한 의견

5. 양계업 안정화(수수조절) 방안은?

육계와 산란계 모두 과잉생산에 따른 수수조절 방안에 대해 조사했다. 종계·원종계 쿼터제 실시가 53.4%로 절반 이상 차지했고, 시설확대 제한 22.9%, 시장원리 적용 11.9%, 사육면적 축소 11.9% 순으로 조사됐다.

산란종계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자율적으로 41만8천수의 쿼터량을 유지해왔지만, 6월 쿼터제 폐지 이후 올 상반기에만 32만1천수의 산란종계가 과잉 입식되면서 양계산업의 불황을 낳았고, 양계인의 절반 이상이 쿼터제 실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용종계 역시 지난해 158,533수 수입되면서 과잉 생산이 지속됨에 따라 종계품질향상과 쿼터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도표5〉 양계업 안정화(수수조절) 방안

6. 양계협회 바라는 사항?

이날 자리에 참석한 양계인을 대상으로 협회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물어보았다.

계란고시가격 준수와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계란거래표준계약서 모델을 만들어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질 사항을 제거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3, 4번 문항에서도 조사된 바와 같이 의무자조금의 조속한 시행으로 양계산업이 부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료인상 가격에 대한 농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하면서 양계인들의 어려운 심정을 대변했다. **양계**